# 국내 채권시장 수급여건 점검 1

2018년에는 기준금리 인상국면에서 이례적으로 100조원대 채권순발행 가능성
통상적인 통화정책 순환주기를 감안할 때 향후 2~3년 가량 금리인상 지속 예상
금리인상 초기국면 채권순발행 증가 및 문재인 정부의 국공채 순발행 증가 부담

## 2018년 국내채권 순발행 100조원 내외

2018년 국내채권 순발행 규모가 100조원 내외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과거 국내채권 연간 순발행 규모가 100조원대를 기록한 사례는 총 3번으로 2009년(166조원), 2013년(114조원), 2015년(109조원)에 국제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연간 100조원대 채권순발행 당시는 기준금리 인하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국채 확대가 채권순발행을 주도한 반면 현재는 금리인상 국면에서 대규모 채권순발행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채권시장 수급여건이 차별화된다. 금리인상 국면에서는 채권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채권공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수급부담 측면이 시장악재로 부각될 수 있다.

## 국내 채권금리 상승국면 진입

2017년을 기점으로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채권금리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순환주기(Cycle)를 가지며, 채권금리는 통화정책 순환주기에 의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인 7년 내외의 순환주기를 갖는다. 작년 11월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으며, 과거 금리인상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 2~3년 가량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현재 한국은 기축통화(基軸通貨) 국가인 미국보다 채권금리가 낮은 상황이며, 한-미 채권금리 역전(-)은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국내 채권수급 공급여건 점검

작년 국내채권 순발행 규모는 85조원 가량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규모(증가율)가 40조원(88%)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초기국면에서는 경기확장 진입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및 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며 민간부문 채권순발행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갖는다. 또한 중앙은행 통화조절 수단인 통안채(통화안정화증권)도 수출경기 호전에 따른 외화유동성 흡수를 위해 채권순발행이 일부 늘어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공채(국채 및 공사채) 순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채권 순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한 100조원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창섭
changsob@truefriend.com

# I. 국내 채권금리 상승국면 진입

## 1. 통화정책 순환주기 전환국면

**채권금리 순환주기 상승국면 전환**

2017년을 기점으로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채권금리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순환주기(Cycle)를 가지며, 통상적으로 채권금리는 통화정책 순환주기에 의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2017년 11월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으며, 과거 금리인상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 2~3년 가량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인 7년 내외의 순환주기를 갖는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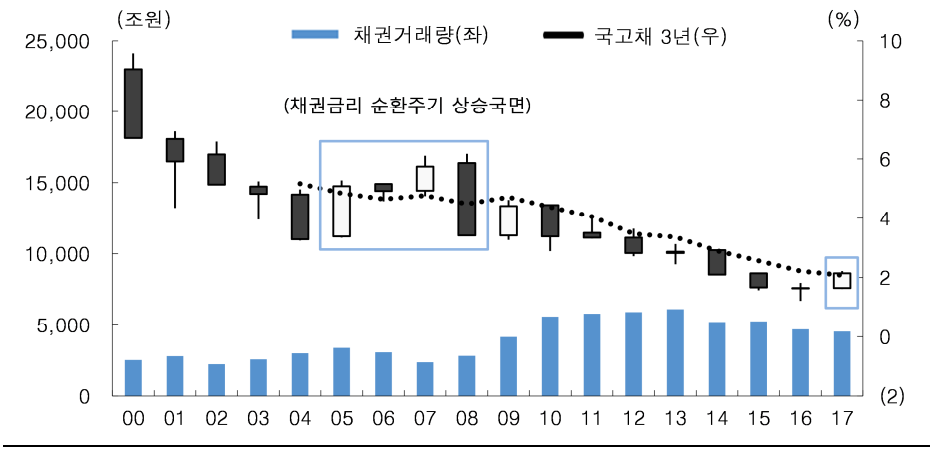
**국내 채권금리 장기추세 하락 상황**

한편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본격적인 성장둔화가 나타남에 따라 국내 채권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경제의 저금리 문제의 심각성이 주목된다. 수출 중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대내외 금리차는 환율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기축통화(基軸通貨) 국가인 미국보다 채권금리가 낮은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리도 향후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역전(-) 될 수 있다.

**한국-미국 채권금리 역전(-) 문제**

이러한 한국-미국 채권수익률 전체의 역전(-)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이에 따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등이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 사태 당시 급격한 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최단기간 구제금융 상환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는 전세계 10대 외환보유고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미 채권금리 역전(-) 문제는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2017년을 기점으로 채권금리 상승국면 전환**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 II. 국내 채권수급 공급여건 점검

## 1. 국내 채권순발행 규모

**2000년 이후 연평균 70조원대 순발행**

2000년 이후 국내 연평균 채권순발행 규모는 70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미국 비우량(Sub-Prime) 주택담보대출(Mortgage) 부실에 따른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전 국내 채권시장의 채권순발행(채권발행-채권만기) 금액은 50조원 내외였다.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국내 채권순발행 규모는 80조원 내외로 늘어났다. 채권순발행은 일반적으로 채권금리 상승국면 초기에 확대되는 가운데 다시 금리인하 초기에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성을 갖는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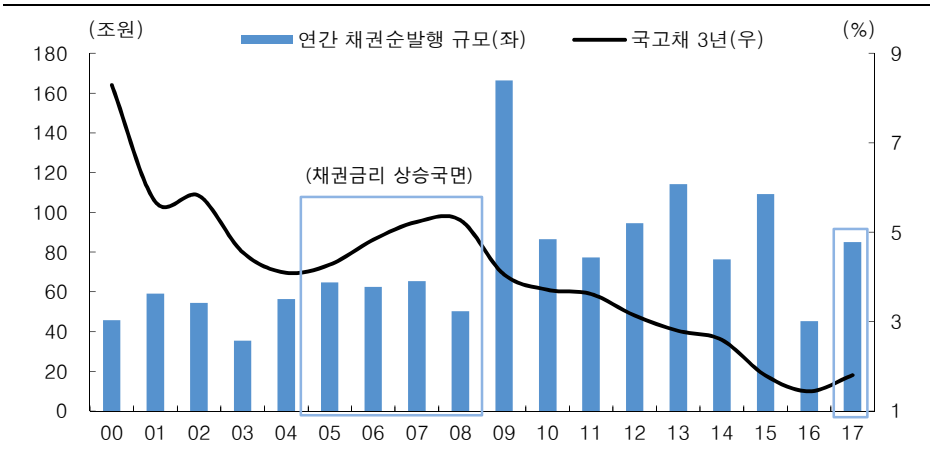
**공공부문 채권순발행이 70% 가량의 비중**

채권종류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채권순발행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문별 국내채권 순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는 국채, 공사채, 통안채 비중이 각각 41.3%, 18.1%, 8.8%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금융채와 회사채 순발행 비중이 각각 20.4% 및 5.8%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체채권 순발행에서 국채 및 공사채의 경우 60% 가량의 비중뿐만 아니라 국내 장기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채권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권순발행은 자금수요 측면에서 채권금리 상승요인**

채권순발행은 자금수요를 나타냄에 따라 수급여건에서 채권금리의 상승요인이다. 채권금리(이자율)는 기본적으로 채권공급(자금수요)과 채권수요(자금공급)에 따른 수급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공급(자금수요)이 늘어나면 채권금리(이자율)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채권공급(자금수요)이 줄어들면 채권금리(이자율)이 하락한다. 여기에서 채권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채권발행이며, 채권은 만기도래에 따른 자금공급 부문이 있기 때문에 채권발행에서 채권만기를 차감한 채권순발행이 실제적인 채권공급(자금수요)에 해당한다.

[그림 2] 국내채권 순발행 vs. 국고채 3년 수익률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2. 국내 채권발행 규모

**국내 채권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채권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연간 국내채권 발행물량은 200조원대를 기록했으나, 2017년 채권발행 금액은 600조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채권순발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채권잔액 증가에 따른 채권만기 차환발행(Roll-Over)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채권발행에서는 점진적으로 채권만기의 장기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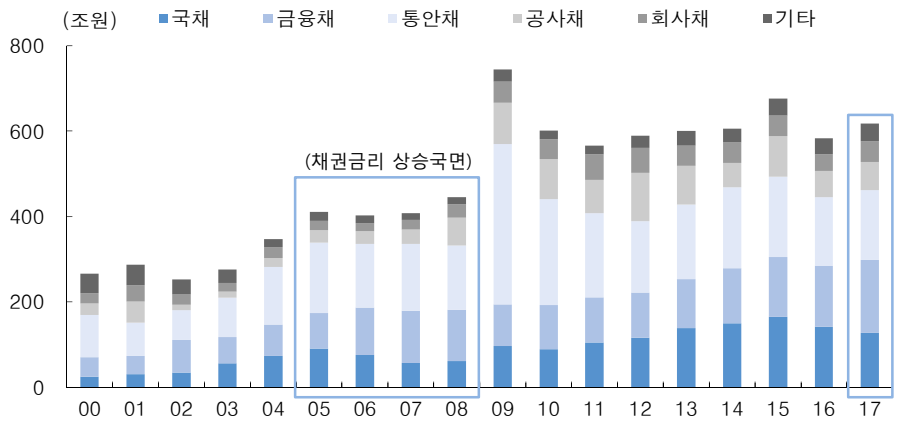
**채권종류별 발행에서는 채권만기 영향 고려**

채권종류별 발행에서는 채권만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부문별 국내채권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통안채, 금융채, 국채의 비중은 각각 34.1%, 21.3%, 18.9%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순발행에서 통안채(8.8%), 금융채(20.4%), 국채(41.3%) 비중과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통안채와 국채의 경우 순발행 규모 대비 발행물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안채의 경우 만기가 2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차환물량이 빠르게 돌아오는 반면 국채는 장기채권 발행비중이 높아 차환발행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채권발행은 1차적으로 채권금리가 결정되는 과정**

채권발행은 1차적(Primary)으로 채권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이다. 채권시장은 자금수요(채권발행자)와 자금공급(채권투자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채권금리와 채권발행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채권발행에서는 채권공급(채권발행자)과 채권수요(채권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권수요 대비 채권공급이 많을 경우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채권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또한 발행금액 대비 입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채권입찰 응찰률은 채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해야 한다.

**[그림 3] 연간 국내채권 발행규모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3. 국내 채권만기 규모

**국내 채권만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채권만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연간 국내채권 만기도래 물량은 200조원대를 기록했으나, 2017년 채권만기 금액은 500조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내채권의 순발행(채권발행>채권만기) 기조로 인해 채권잔액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채권만기 증가는 차환발행(Roll-Over)을 통해 채권발행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채권만기가 도래할 경우 일부 채권순상환(채권발행<채권만기)을 제외하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차입 연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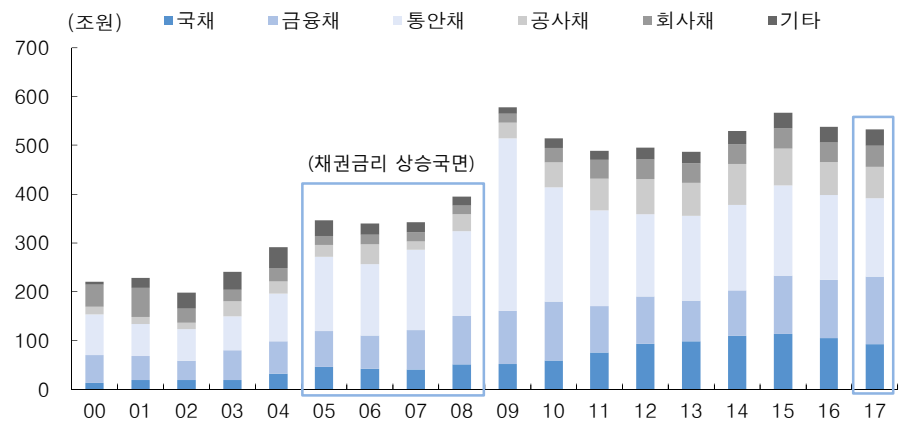
**채권만기 도래에서는 채권종류별 영향 고려**

채권만기 도래에서는 채권종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부문별 국내채권 만기도래 현황을 살펴보면 통안채, 금융채, 국채의 비중은 각각 38.8%, 21.4%, 14.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순발행에서 통안채(8.8%), 금융채(20.4%), 국채(41.3%) 비중과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통안채와 국채의 경우 순발행 규모 대비 발행물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안채의 경우 만기가 2년 이내로 제한되는 반면 국채는 높은 장기채권 발행비중 및 만기분산을 위한 조기환매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채권만기 도래에서는 채권종류별 구조가 중요**

채권만기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채권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채권투자에서는 1차적으로 발행시장을 통한 입찰참여를 통해 투자에 나서게 되며, 이에 따라 발행시장에서 투자대상 채권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채권만기 도래는 차환발행을 통한 신규 채권발행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투자시기에 채권만기 도래가 많을 경우 채권입찰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또한 투자시기에 채권종류별로 다양한 채권만기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만기 및 투자등급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 연간 국내채권 만기도래 규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4. 국내 채권시장 규모

**국내 채권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채권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채권 시가총액은 500조원대를 기록했으나, 2017년 연말 기준 국내채권 시가총액 금액은 1,700조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연간 채권발행이 채권만기를 상회하는 순발행(+) 기조가 이어지며 채권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금액이 1,700조원대인 것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 대비 채권시장 규모는 1.0배 수준이며, 이는 경제규모 대비 채권시장 규모로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시장이 크다[그림 5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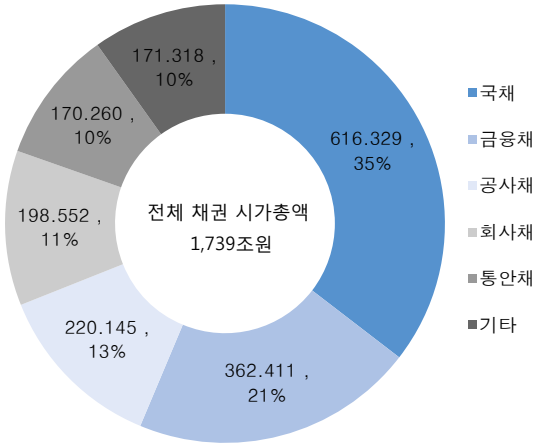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 채권종류별 비중 현황**

채권종류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채권잔액이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부문별 국내채권 발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는 국채, 공사채, 통안채 비중이 각각 35.4%, 12.7%, 9.8%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금융채와 회사채 비중이 각각 20.8% 및 11.4%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공사채 및 회사채의 순서로 시가총액에서 비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채권시장에서 국채 및 금융채가 채권순발행을 주도하며 국채와 금융채 부문이 채권시장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내 채권시장 잔존만기별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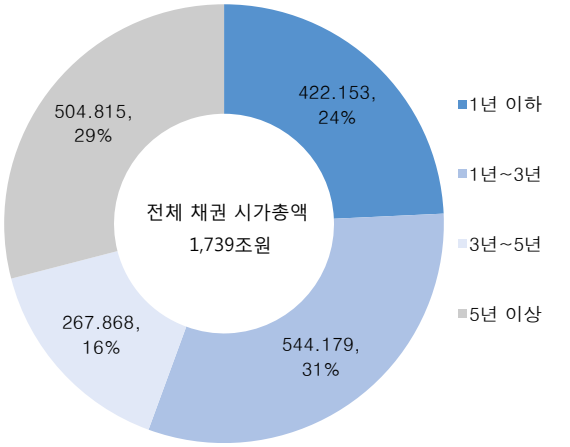
잔존만기별 시가총액에 있어서는 5년 이하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잔존만기별 국내채권 발행잔액을 살펴보면 만기 3년 이하 영역이 5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존만기 5년 이상 채권잔액의 비중은 30% 가량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는 잔존만기 3년 이하 영역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만기 5년 이상 채권의 비중은 10%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국채를 중심으로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발행이 늘어나며 전체 채권 만기구조에서 채권만기 장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2017년 연말 국내 채권종류별 시가총액**




자료: KIS, 한국투자증권

**[그림 6] 2017년 연말 국내 잔존만기별 채권잔액**




자료: KIS, 한국투자증권

# III. 국내 채권수급 공급여건 시사점

## 1. 금리인상 초기 채권순발행 증가

**2017년 채권순발행 전년대비 90% 가량 증가**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작년에 채권순발행도 크게 늘어났다. 2017년 국내채권 순발행 규모는 85조원 가량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규모(증가율)가 40조원(88%) 가량을 기록했다. 이는 순상환(채권발행<채권만기) 기조를 나타냈던 회사채와 공사채 부문이 순발행(채권발행>채권만기)으로 전환한 가운데 금융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부문 순발행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35조원)와 함께 금융채(33조원) 부문이 전체 채권순발행의 80% 가량을 차지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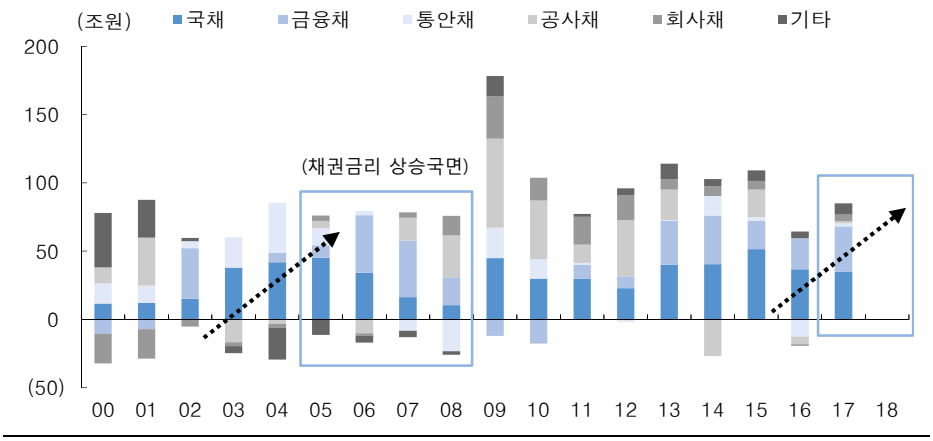
**금리인상 초기국면 민간부분 채권발행 증가**

기준금리 인상국면 초기에 민간부분 채권순발행 증가 양상에 주목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 초기국면은 경기확장 진입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및 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며 민간부문 채권순발행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갖는다. 국내 채권시장의 경우 금리인상 초기에 금융채 순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투자 및 운전자금 용도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며 회사채 순발행도 일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부문 자금수요에 따른 채권순발행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올해 공공부문 채권순발행 증가 가능성**

또한 올해에는 공공부문 채권순발행 증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 국면에서는 경기확장에 따른 세수증가 및 경기부양 필요성 감소 등으로 국채와 공사채 등 공공부문 채권순발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번 기준금리 인상국면에서는 공공부문 채권순발행이 이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수단인 통안채(통화안정화증권)의 경우에는 수출경기 호전에 따른 외화유동성 흡수를 위해 금리인상 초기국면에 채권순발행이 일부 늘어난다.

**[그림 7] 연간 채권종류별 순발행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2. 향후 국공채 순발행 증가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국채 및 공사채 순발행**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공채(국채 및 공사채)의 순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이후 2018~2022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178조원을 책정했다(연평균 35조 6,000억원).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연평균 22조 4,000억원의 재정개혁과 13조 2,000억원의 세입개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연평균 정부지출 증가율(5~7%)이 경제성장률(4~5%)을 상회하게 되어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표 1].

**정권교체와 함께 나타난 재정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와 함께 재정정책 방향성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평가한다. 정권교체 이전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 금융위기와 함께 크게 악화된 재정건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균형재정 정책을 지속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부분 재정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국채발행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증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17년 공사들의 재정건전화법 종료로 인해 기존 공사채 순상환 기조가 순발행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 국정자문계획위원회, 한국투자증권

## 발간자료 목록

| 발간일 | 자료제목 | 핵심내용 |
|---|---|---|
| 2018-03-08 | 한국인의 자산관리 –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적응 |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및 주식시장 조정 양상에도 세계경제 실물경기 개선국면 주목 |
| 2018-02-28 | 2 월 금융통화위원회 – 만장일치 금리동결 지속 | 3 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추가 금리인상 경우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 |
| 2018-02-05 | 한국인의 자산관리 – 새로운 금융환경의 등장 | 주요국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위험자산 약세와 가격변동성 확대 등 새로운 금융환경 |
| 2018-01-18 | 1 월 금융통화위원회 –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 향후 추가 금융완화 조정에 대한 신중론을 반복하며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 시사 |
| 2018-01-02 | 한국인의 자산관리 – 광휘일신(光輝日新)의 자세로 준비 |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호황국면 진입 및 기업실적 호전 등이 위험자산에 우호적 |
| 2017-12-04 | 한국인의 자산관리 – 2018 년을 대비한 투자의 포석 | 경기개선, 기업실적 호전 및 금리인상 기조로 인해 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 투자매력 |
| 2017-11-30 | 11 월 금융통화위원회 – 전격적인 0.25%p 금리인상 | 2011 년 6 월 이후 6 년 5 개월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 |
| 2017-11-15 | 국내 기준금리 인상국면에 따른 채권투자 정공법 | 2018 년 채권투자 전략은 채권금리 상승을 대비한 이자수익 중심의 방어전략 중점 |
| 2017-11-07 | 한국 채권시장 실질금리 Minus(-) 정상화 진행 | 과거 국내 실질금리 Minus(-) 당시 모든 사례에서 채권금리 및 주가지수 상승 발생 |
| 2017-11-03 | 한국인의 자산관리 – 글로벌 금융시장의 명확한 방향성 |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도 전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를 지지하는 상황 |
| 2017-10-31 | 경제성장 측면의 국내 기준금리 균형수준 추정 | 향후 금리인상은 연간 2 회(0.50%p) 가량의 속도로 2019 년까지 2%대 중반 목표 |
| 2017-10-19 | 10 월 금융통화위원회 – 0.25%p 금리인상 소수의견 | 과거 국내 통화정책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 당시 3 개월 내외로 기준금리 인상 단행 |
| 2017-10-10 | 글로벌 경기개선 자신감 및 가시성 확보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경기 선순환 국면이 위험자산에 호재가 될 가능성 주목 |
| 2017-09-20 | 채권투자자를 위한 시황판단 전략지표 Part 2 | 수익률곡선을 활용한 채권금리 선행지표를 통해 단기적인 채권금리 방향성 예측 |
| 2017-09-07 | 채권투자 전략지표 – 금리횡보의 상향돌파 시도 | 9 월 FOMC 를 기점으로 채권금리 변곡점 형성 및 4 분기에 금리상단 상향돌파 예상 |
| 2017-09-04 | 한국인의 자산관리 – 미국 연준의 방향성과 금융시장 | 9 월 FOMC 연준의 자산규모 축소 발표 및 향후 장기적인 채권금리 상승압력 주목 |
| 2017-08-31 | 8 월 금융통화위원회 –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지속 | 시장의 일부 금리인상 소수의견 기대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지속 |
| 2017-08-28 | 개인투자자를 위한 채권투자 길라잡이 Part 3 | 국내 물가국채의 경우 손익분기물가 Scenario 를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 투자적기 |
| 2017-08-07 | 채권투자 전략지표 – 미국과 한국의 시장차별화 | 미국 채권금리 하락 및 한국 채권금리 상승 차별화로 한-미 장기금리차 정상화(+) |
| 2017-08-02 | 한국인의 자산관리 – 위험자산에 대한 방향성은 유효 | 위험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자산별 및 지역별 위험자산 성과 차별화 가능성 유의 |
| 2017-07-24 | 채권투자자를 위한 시황판단 전략지표 Part 1 | 정규분포를 활용한 자산시장 시황판단 전략지표로 가격추세 및 추세의 조정 판단 |
| 2017-07-14 | 7 월 금융통화위원회 –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국내경제 경기개선 상황에서 금리인상 필요성 시사 |
| 2017-07-10 | 채권투자 전략지표 – 금리횡보 조정국면의 마무리 | 한국-미국 기준금리 수렴(=)으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금리횡보 조정장세 마무리 |
| 2017-07-03 | 한국인의 자산관리 – 긍정적인 글로벌 투자환경 지속 | 글로벌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견조한 흐름 및 지역별 자산시장 차별화 가능성 |
| 2017-06-21 | 하반기 자산배분전략 – 3 분기 감속, 그러나 순항의 지속 | 세계경제는 3 분기 조정국면을 거쳐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장국면 진입 |
| 2017-06-12 | 채권투자 전략지표 – 한-미 장기금리차의 정상화 | 미국 채권금리 급락에도 국내 채권금리 하방경직성으로 한-미 장기금리차 정상화 |
| 2017-06-05 | 한국인의 자산관리 – 성장의 중장기 방향성 유효 | 안전자산과 현금에 대한 투자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 유효 |
| 2017-06-01 | 연말까지 0.20%p 내외 채권금리 상승압력 추정 | 경제여건에서 채권금리 상승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인상 필요성 부각에 유의 |
| 2017-05-25 | 5 월 금융통화위원회 – 경제전망 상향조정 시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상향 가능성 시사 |
| 2017-05-22 | 한국경제의 대외 금융투자 순유출 전환 및 시사점 | 한국경제 성장둔화 및 저금리에 따른 투자매력 저하로 투자자금 대외유출 확대 |
| 2017-05-15 | 채권투자 전략지표 – 채권금리 하방경직성 강화 | 채권금리 횡보국면 지속에도 강한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금리추세 상승국면 유효 |
| 2017-05-04 | 한국인의 자산관리 – 글로벌 금융시장 기간조정 통과 | 글로벌 경기개선 가능성이 유효함에 따라 주식 및 원자재 등 위험자산 투자매력 |
| 2017-05-02 | 위험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압력 |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 추가 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강화 유의 |
| 2017-04-20 | 동아시아 저금리 전개 현황 및 채권투자 시사점 | 한국경제의 저금리 심화로 인해 자산운용에서 채권 중심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 |
| 2017-04-13 | 4 월 금융통화위원회 – 성장률 및 물가 전망 상향 |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각각 0.1%p 및 올해 물가 0.1%p 상향 |
| 2017-04-10 | 채권투자 전략지표 – 채권수급 불안요인에 유의 | 원/달러 환율 반등국면 진행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국채선물 순매도 전환 가능성 |
| 2017-04-04 | 한국인의 자산관리 – 세계경제 활력과 개선 가능성 | 미국의 3 월 조기 금리인상은 글로벌 경기개선 신호탄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 기대 |
| 2017-04-03 | 미국 금리인상 전후의 반복적인 채권금리 등락 양상 |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인상 전후 채권금리 포물선 형성 반복 |
| 2017-03-27 | 개인투자자를 위한 채권투자 길라잡이 Part 2 | 채권펀드 투자에서는 채권금리 국면을 고려해 펀드 Style 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